

민주,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표 기본사회’ 명시

중앙위, 강령·당헌 개정안 확정
기본소득→주거·금융으로 확장
공천 불복면 10년간 출마 제한
비명계 견제 의도 시각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강령에 구체화했다.

출마 제한과 관련해서는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강령 개정 채택의 건은 중앙위원 564명 가운데 424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3.63%(397명)이 찬성했다.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비전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

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 개념이다.

강령개정 분과 회의에서는 ‘기본사회’가 이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만큼, 특징인의 정책을 당 강령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다수가 기본사회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게 당의 비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중심주의’도 담겼다.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당 목표로 정하고, 당원권한 강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에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손질한 바 있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

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6월에 감산 대상을 공천 불복으로 변경했는데 당헌 84조에는 경선 불복이란 단어가 그대로 있어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며 “공천 불복은 당헌 100조에 나와 있듯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에 항의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 비명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 출범

“대형 포털 불공정 행위 대처”

국민의힘은 12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는 편향된 뉴스 플랫폼이라는 국민 여론이 쏟아졌다”며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시스템 편향성 문제와 개인·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

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변칙적 상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상황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판매자·피해자 보호 측면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포털은 기사 배열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따르고 사회적 책임을 재고해야 한다”며 “포털 뉴스 제휴의 불공정 이슈 점검을 시작으로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기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연다. 19일에는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광주시당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통과 협력”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12일 전남대병원 행정동 접견실에서 정신전남대병원장, 새 병원추진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 병원 신축 사업 예타 통과 등을 논의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사업 추진상황을 설명한 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 조기 통과와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신 병원장은 “전남대병원의 건물 노후화와 이에 따른 비효율화 등 악순환은

수도권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새 병원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예타 통과 및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현 시당위원장은 “새 병원 건립은 지역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당 지도부에 협조를 구하고 대통령 광주 민생토론회 건의 사항 반영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1070병상·연면적 24만㎡·사업비 1조1438억원 규모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성현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 “대한민국, 청년 안세영에 화답해야”

진보당 전남도당은 12일 “청년 안세영의 외침은 속에서 응축된 외침이며, 때를 만나 솟아났다”며 “이 아름다운 용기에 이젠 대한민국이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이성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자식 발언에는 협회의 선수 관리, 행정, 정관, 운영 지침 등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이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그의 외침은 사회적 권위에 대항하며 싸우는 각종 ‘을’의 도전이고

억울한 자들의 목소리로, 22살 청년의 정당한 주장이 낡은 질서 속에 갇혀 버린다면 세상 누가 용기내어 소리치겠냐”며 “정부와 체육회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구조 개혁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 파리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선수단에게 거둬야 할 값어치는 박수와 찬사를 보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활동과 생존권 보장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의원식 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면담

의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을 찾아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공동취재

야 6당, 김형석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야(野) 6당이 12일 윤석열 정부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6당이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의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

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훼손한 김형석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고,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인물로 독립기념관장을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 제출 후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도 아닌 친일파”라고 각

을 세웠다.

신장식 의원은 “결의안이 (분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임명을 철회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만 의원은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 온 잘못된, 그릇된 역사관에서 이뤄진 광복절이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이 맞고 그건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 이념을 지녔던 분들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수사의외압·구명로비 은폐 선언”

“尹 정권 국정농단 중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임명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데 대해 “순직해병 수사의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권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

다”며 “심지어 수사자료 회수가 이뤄지는 동안 이종섭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의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장관에 앉히려는 제정신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찰’하면서까지 대

통령의 심기 보좌에 힘썼던 경호처장”이라며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현 처장이 앉아야 할 자리는 해병대원 수사의외압 특검의 조사실뿐”이라며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절차로 여기는 대통령의 오만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의 부적격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낱알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